

입학사정관제, 고등학교 교사의 입장을 이해해야 합니다

김태진 | 대구 대진고등학교 교사

2009년 11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에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2011학년도 입학사정관전형은 118개 대학에서 실시하며 모집 인원은 37,628명이다. 이는 2010학년도에 97개 대학에서 24,622명을 모집한 것보다 21개 대학 13,006명이 더 늘어난 것으로 2011학년도 대학 신입생 10명 중 한 명(9.9%)을 입학사정관전형으로 선발하는 셈이다. 실제 2011학년도 수시전형에서 입학사정관전형으로 선발하고자 하는 학생 수는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우나 원래 계획보다 많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을 것이다. 선발 인원이 계속 증가하는 만큼 수험생, 교사, 학부모 및 입시관련기관들의 관심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학생부나 수능시험에 자신이 없는 학생들의 관심과 지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각 대학의 입학사정관전형을 살펴보면 많은 대학이 학생부 성적을 전형 요소로 반영하거나 수능시험 성적을 최저 학력 기준으로 활용한다. 따라서 학생부와 수능시험에 자신이 없어 이 전형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라면 큰 오산이라 보인다. 학생부 성적이나 모의고사 성적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가 바로 입학사정관전형이라고 보는 순간 이 제도에 대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이다. 학생부와 수능시험 성적이 좋지 않고서는 결코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없다고 마음먹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면 한다. 결국 충실한 학교생활이 표출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입학사정관전형을 준비하는 데도 수월할 수 있을 것이며, 전형 담당자도 보다 쉽게 업무에 임할 수 있을 것이다.

각 교육주체가 입학사정관전형을 보는 눈은 조금씩 차이가 있어 보인다. 이런 배경에서 현장 교사의 눈에 비친 이 제도의 현실적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보다 바람직한 입학사정관전형, 나아가 입학시스템에 대해 재인식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1. 제도에 대한 인식 문제

점진적으로 확대되어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선발 정원의 10% 안팎이다. 90% 정도는 비입학사정관전형인데도 지나치게 과열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또한 무늬만 입학사정관전형인 대학도 더러 보이는 듯하다. 공교육 기관이든 사교육 기관이든 입학관련 설명회의 최대 이슈는 입학사정관전형이다. 학교에서도 학교 경영자의 관심은 물론이고 전담 부서까지 만들어지고 있으며, 사설 입시 컨설팅 업체도 떠나없이 입학사정관전형을 내

세운다. 마치 대한민국의 모든 대학입시가 입학사정관전형으로 귀결되는 듯하다. 그러나 지속적인 선발인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입시의 대세는 아니다. 다만 수도권외의 대부분 대학들이 수시모집 전형에서 입학사정관전형으로 많은 인원을 모집하는 것을 간과할 수는 없다. 자칫 너무 이 전형에 관심을 둬서 비입학사정관전형 지원자들이 소외될 수도 있다. 모든 면에서 급격한 변화나 관심은 반드시 문제점을 노출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서 보다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입학사정관전형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형 유형에 지원 가능한가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입학사정관전형은 내신 성적 우수자나 이학 특기자 전형처럼 특정 지원자격을 요구하는 전형 중 하나가 아니라, 대학이 실시하는 다양한 전형 가운데 입학사정관이 관여하는 전형을 모두 가리키는 것으로, 잠재 능력 우수자, 자기 추천자, 학교장 추천자, 지역 균등 선발, 학생회 임원, 과학 인재, 외국어 우수자, 학생부 우수자, 농·어촌 학생, 전문계 고교 출신자, 특기자, 사회적 배려 대상자 등 여러 전형 가운데 어느 전형에 지원이 가능한지, 또 희망 대학이 이들 전형을 입학사정관전형으로 실시하는지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그런 다음 희망 대학의 수능시험 최저 학력 기준 등 세부 지원 자격과 학생 선발 방법을 살펴보고 대비해야 한다. 이때 특히 많은 대학이 자기소개서와 추천서를 비롯해 학업계획서, 학생부 비교과 실적, 봉사 활동, 동아리 활동, 임원 경력, 각종 수상 실적, 자격증 등을 서류평가 자료로 활용하므로 이를 꼼꼼히 알아보고 준비 가능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 2010년 4월 대교협의 공통 기준안 발표에서 공인 외국어 성적이 제외됨으로써 일대 파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또 대학은 부러부러 전형유형을 변경하기도 했다.

서류평가는 입시철에 임박해서 준비하기에는 어려므로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므로 미리미리 알아보고 챙길 서류와 준비할 것을 체계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좋다. 특히 자기소개서와 학업계획서는 어떻게 작성할 것인지 고민하고 미리 준비하여야 한다. 서류평가 외의 학생 선발 전형 요소로는 학생부와 면접고사 등을 주로 활용하는데, 대학에 따라 반영 방법과 출제 경향에 차이가 있다. 이에 희망 대학이 이들 전형 요소를 어떻게 반영하는지 2011학년도 입학전형 주요사항을 통해 확인하고 대비해야 한다.

또한 학생부와 수능시험 대비를 소홀히 하고서는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잊지 말고 학생부와 수능시험 대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각 고등학교가 이렇게 준비해 나간다는 것을 대학이 인식하고 학생 선발에 임해야 할 것이다.

2. 제도의 변경에 따른 혼란

2010학년도 1학기부터 중·고교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각종 올림피아드나 경시대회, 영어 쓰기·말하기 대회 등 교과와 관련된 교외 수상 경력은 적을 수 없게 되었다. 사교육을 유발하는 입학전형요소를 학생부에 적지 못하도록 관련 혼령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며, 학생부가 올해 고입과 대입의 입학사정관제 전형에 본격 활용되기 때문에 사교육을 유발하는 활동을 줄이기 위해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올림피아드에서 메달을 따거나 국제기능올림픽에 입상한 실적도 학생부에 담을 수 없게 했다. 이에 따라 개인의 소질과 역량을 가장 잘 보여주는 내용까지 반영하지 못하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생부 기재 길라잡이'를 통해 기록이 가능한 또는 금지된 수상 실적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길라잡이에 따르면 교외에서

받은 상은 학교장 추천이나 학내 예선·추천심사위원회 선발 등으로 뽑혀 출전한 경우에만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다. 교과부나 시·도(지역)교육청이 후원한 대회는 교육장(감), 교과부 장관 등 부처 기관장 이상이 주는 실적만 적는다. 특히 교과와 관련한 교외 수상 실적은 입력이 금지된다. 예를 들어 효행상·선행상·모범상·봉사상 등은 쓸 수 있다. 그러나 효행 글짓기대회, 봉사 UCC대회 등 교과와 관련된 내용은 교과부·교육청의 주최, 주관, 후원 여부를 떠나 적어서는 안 된다는 게 교과부의 설명이다. 논술·문제백일장이나 영어대회, 수학·과학·정보 올림피아드, 모의증권·모의법정대회, 전국소년체전, 올림픽, 콩쿠르 등에서 상을 받아도 학생부에는 남지 않는다.

이와 같은 성적은 '수상 경력'을 기록하는 곳뿐 아니라 '진로 지도', '창의적 재량활동', '특별 활동' 등 다른 항목의 특기사항으로 써서도 안 된다. '교외 체험학습 상황'에도 학교장이 수업으로 인정된 기관·단체의 행사 참여나 개별 교외체험 내용을 입력할 수는 있으나 대회 출전 사항은 학교장 인정 사항이라도 입력해서는 안 된다. 고등학교 전 학년 학생부에 기록하던 독서활동 상황은 올해부터 중학교 전 학년에도 적용된다. 자격증 및 인증 취득 상황은 초·중학교는 올해부터 기록하지 않고 고교의 경우에만 종전과 같이 적는다. 또 일반학교의 영재학급과 대학·지역교육청의 영재교육원 등에서 학생이 교육을 받았을 경우 영재교육기관장이 학년 말 해당 학교장에게 알려 학생부 '행동특성 및 종합 의견란'에 기재하도록 했다.

비단 교과부의 정책 변경뿐만 아니라 각 대학이 기존의 전형을 없애거나 예고 없이 변경해 버리고, 혹은 새로운 전형을 급하게 신설하는 등 여러 면에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대비를 어렵게 하는 문제

점이 노정되고 있어 학생들과 교사들의 부담으로 다가서고 있다. 결국 입학사정관전형과 대단히 유사하지만 약간 다른 특별 전형이 확대되는 결과를 낳지는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해 본다.

3. 추천서 문제

교사의 관심, 능력, 전문성, 열정에 따라 추천서 내용과 형식에 차이가 너무도 크게 나타나고 있다. 모 대학에서는 추천서를 불성실하게 작성한 교사들을 블랙리스트로 만들겠다고 하고 있지만, 사실 일선 교사들에게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모 대학 입학사정관전형 실제 평가과정에 참여해 보니 추천교사에 따라 그 분량과 내용 및 표현 방식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었다. 학생들도 담임교사와 관계가 매끄럽지 못하거나 여러 대학의 추천서가 필요할 경우, 종교기관이나 사회유관기관에 부탁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설령 담임교사의 부담이 가중될지라도 추천서는 반드시 담임교사가 작성하게 해야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이루어지리라 판단한다.

또한 여러 정황 요소가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탈락한 학생이 발생할 경우 고3 담임교사는 죄책감마저 가질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해 기존의 추천서를 유사하게 활용할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고 있지만, 과연 모든 학생, 모든 전형에 대해 새로운 추천서를 작성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조금이라도 잘 써주어야 한다는 부담이 수업과 다른 교육 활동을 포기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면 이 또한 새로운 문제점으로 부각된다 하겠다. 또한 추천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항목 역시 '1,000자 × 5항목'을 가정할 때, '5,000자 × 40명 × 4회'(예) 만큼의 숙제가 부담으로 작

용한다고 볼 수 있다.

4. 담임교사 및 학생의 부담

입학사정관전형이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시행되다 보니 다양한 전형 영역이 나타나고 그로 말미암아 수험생이나 고교 입장에서는 대학별로 다른 전형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수시 원서접수 기간이 일주일 이내로 한정돼 원서를 준비하는 수험생이나 교사는 대학별로 다르게 요구하는 자료 준비에 애를 먹는 현실이어서 대학이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추천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대교협은 공통 양식을 공개하기도 했다.

원서 접수는 항상 일정 시기에 집중된다. 올해 역시 9월 8일부터 12월 초까지이지만, 실질적으로 9월 중순에 집중된다. 대교협에서는 2012학년도 입시부터 입학사정관전형만 한 달여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지만, 한 학생이 여러 학교를, 혹은 여러 학생이 지원할 경우 그 효과는 의문이다.

많은 입학사정관들은 고교 학교생활기록부가 있지만, 대학이 별도 추천서와 자기소개서 등의 자료를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학생부가 수험생의 잠재력을 측정하기에 충분하지 못한 탓이라며 잠재적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은 불가피하다고 하고 있다. 또한 학생부에는 학생의 창의성을 평가할 요소가 없어 입학사정관제가 요구하는 학생의 잠재적 역량을 평가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아 대학에서 각기 다른 형식의 자기소개서와 추천서, 포트폴리오 등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처럼 대학의 다양한 요구를 수험생이 맞추다 보니 사교육 시장에서 추천서 대필 사례도 발생하는 등 공정성 시비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주요

대학의 전형요소를 분석하여 리더십, 창의력, 봉사정신 등이 표출되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대교협의 공통 양식안에 따라 교사들이나 학생들의 부담이 다소 줄어들기는 하겠지만, 여전히 문제점은 남아 있어 교사들이 수업을 포기하고 서류를 작성, 보완한다든지, 학생들도 학습을 뒤로한 채 오로지 서류 정리 및 포장에 온 힘을 쏟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 하나의 부담은 지원 기준이 애매하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정시 모집에서는 거의 정확한 배치 기준이 제시되며, 수시 모집에서도 누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어느 정도 배치 기준을 제시해 주고 있지만, 입학사정관전형은 기준이 너무도 모호하다. 따라서 학생들은 자신의 기준에서 합격 가능성을 확신하지만, 대학의 건학 이념이나 선발 방법이 다양하고 복잡하여 일일이 다 알 수는 없으므로 점점 사교육 시장이 확대되는 듯하다. 교과부나 대교협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기준을 제시해 준다면 현장의 혼란을 다소나마 막을 수 있으리라 본다.

5. 결과에 대한 수긍 문제

모든 대학이 입학사정관전형의 공정성에 대해 힘주어 강조하고 있으나, 여전히 공정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각 대학이 전형 결과를 발표하면서 빠뜨리지 않는 것이 교과 성적이 부족한 학생들의 합격 사례이다. “..... 비록 수학 교과 성적이 7등급이었지만, 우리는 이 학생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여 선발하였다. 1학년 과정을 지켜본 결과 우리가 이 학생을 선발하지 않았다면 가능성 있는 미래의 인재를 놓쳐버리는 우를 범할 뻔했다. 앞으로도 우리는 이러한 유형의 인재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다.....” 물론 사실이다. 그것도

실명까지, 출신 고등학교까지 상세히 드러내 준다. 그러나 이는 아주 일부의 사례일 뿐, 여전히 학생부 교과/비교과 성적, 수능 성적, 각종 서류, 면접, 대학별 고사 중 대학의 반영 조합에 따라 대부분의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수험생이 합격한 경우 수험생, 교사, 학부모 모두 결과에 승복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그 결과에 대한 합리적 설득은 어려운 점 역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 채점 과정에 참여해 보니, 여러 사람의 눈으로 여러 번 점검, 검토하여 공통적인 관점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러나 “모두가 다 만족할 수 있을까”는 여전히 의문이다. 정성적인 내용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어찌겠는가? 이와 함께 입학사정관들의 자질 및 전문성에 대한 의문 역시 시급히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이다.

6. 요강 발표 시기

각 대학은 전년도 11월 대교협에 차년도 입시 전형안을 제출하고, 일선 학교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진학지도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수시 모집 1개월 전에야 비로소 최종안이 공개되며, 정시 모집의 경우는 수시 모집 결과/등록이 이루어지고 나야 모집 정원 등 정확한 전형안이 발표된다. 이는 결국 장기적인 준비와 전망을 어렵게 하는 요소가 되고 있으므로,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미리 확정된 입시 전형안을 발표해 주었으면 한다. 그래야 고등학교 과정을 통해 지속적이고 진정성 있는 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며, 진로 교육을 바탕으로 한 진학 교육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대학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반수나, 2학년 재수나 하는 사태나, 심지어 대학교 3학년을 마치고 다시 수능시험을 치르는 경우는 없어야 할 것이다. 심지어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몇몇 뉴스를 접하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심

정이다. 진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대학도 보다 관심을 바탕으로 준비된 학생을, 열정과 가능성을 갖춘 인재를 선발, 교육할 수 있을 것이다.

변화하는 여건 등을 감안하여 3년 전 공시가 어렵다면 최소한 1년 전이라도 확정안을 보고하게 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어야 현장에서의 혼란을 막고, 신뢰성을 높일 수 있으리라 본다. 진학박람회 상담 과정에서 울분을 토로하던 한 학부모가 아직도 생생히 기억 난다. 한 전형만을 생각하고 2년 반을 준비해 왔는데, 갑자기 전형이 바뀌는 바람에 딸아이가 공황상태에 빠져버렸다던 눈물겨운 하소연에 대해 누가 속 시원한 대답을 줄 수 있을지 의문을 던진다.

이상에서 현장 교사의 눈에 비친 입학사정관제의 현실과 문제점, 대안을 제시해 보았다. 필자의 생각이 강하게 묻어나고 있음을 부정하지는 못하겠지만, 앞으로 더 좋은 제도로 정착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물론 모든 사람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는 없다. 그러나 입학사정관제도에 대한 보다 바람직한 방향성이 정립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고교와 대학이, 학생, 학부모 그리고 교사가 모두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

필·자·소·개

김태진

경북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동대학원 교육행정전공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대학 자문위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상담 위원 및 대표 강사, 전국진학지도협의회 대학별고사 연구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진로 교육과 진학 교육의 조화를 통한 바람직한 입학사정관전형에 관한 연구와 강연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